

시연대에 선 언론

박인순

중재위원 ·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

우리 나라 대통령이 아프리카 각국을 순방한 적이 있었다. 함께 다녀왔던 어느 경제인이 귀국 직후 한 말, "나라 같지도 않은 부족집단 국가들과 무슨 경제협력을 합니까. 굳이 투자를 하라면 세탁소나 사진관 같은 것이 장사나 될까?"

굶주리는 북한동포에게 쌀을 보낸다면서 첫 배가 출항하던 날, 정오 뉴스를 들으며 달리던 택시운전사는 볼멘 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쌀 나한테나 주지... 아침도 못 먹고 학교 가는 애들이 여기에도 얼마나 많은데 ..."

당시 언론- 신문, TV, 라디오들이 엄청난 국제경제협력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또 통일의 물꼬를 튼다고 요란하게 보도를 했던 것과 훗날의 결과가 어땠을지를 생각해 보자.

1 인당 국민소득이 1 만 달러 선을 넘어섰다는 발표가 나왔을 때 언론은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됐다."면서 많은 기획, 특집기사와 프로그램을 보도했다. 하기는 이보다 앞서 선진국 문턱에 이르렀다는 정부의 홍보자료를 몇 년 동안 열심히 알려오던 터여서, 순서를 따지자면 아귀가 딱 들어맞는 얘기였다. 어쨌거나 쏟아붓다시피 했던 언론의 각종 부추기는 기사와 TV 화면, 발빠른 사회 단체들의 사치를 자극하는 행사등과 함께 우리 국민의 과소비, 낭비적 성향은 수직적인 상향곡선을 치달았다. 외국 언론들은 벌써부터 "한국 국민들이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렸다."면서 비아냥거림을 해오고 있을 때다. 97년 봄부터는 우리 나라의 외환사정이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그러나 공개적으로 경고와 우려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해 10 월, 6.25 한국전쟁 이후 최대 국난이라는 'IMF 한파'가 우리 나라를 엄습했다.

우리 언론의 '오보사례'를 모은 희한한 전시회가 열린 적이 있지만, 무책임한 허위, 과장보도까지 일일이 따지자면 그 또한 부지기수일 듯하다. 물론 그간 언론이 국가발전에 기여한 바를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날 어두웠던 시절, 민주화 투쟁의 주역은 언제나 언론이었다. 경제발전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에게 희망을 주고 사회의 균형발전을 이끄는 데서도 언론의 앞장선 노력과 고초가 항상 길잡이가 되어왔다. 다만 일부 잘못된 부작용이 있었던 것이, 그리고 부작용과 폐해가 점차 늘어나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기에 문제라 할 수 있다. 언론은 영향력과 공공성이 크기 때문이다.

언론도 본래 기능인 비판과 견제 나아가 대안제시 등 계도적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권력의 입김에 따라 그릇된 여론을 만들어 내면서 경제주체들과 국민을 오도해 온 책임이 적잖다고 할 수 있다. 세계의 흐름을, 심지어 외국언론의 경고까지 외면했으니 말이다. 권력과의 공생에 순치했던 탓이라 할까.

요즘 들어 언론계 일각에서 경영과 편집, 편성제작의 분리, 나아가 언론의 민주화, 개혁을 위한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는 것은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다. 언론사 신설조건을 까다롭게 규정한 현행 언론관련 법-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방송법 등을 고쳐 자유경쟁으로

공익언론이 창달될 수 있는 길을 트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독과점 언론사 사주들-경영진들과 권력층 간의 밀착에서 파생되는 그릇된 여론의 전파나 확산을 막을 수 있으리라는 계산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가 체질개혁을 위한 환골탈태의 몸부림을 하고 있는 마당에 언론도 함께 해야 진정한 의미의 국가 개혁이 가능하리라는 주장이다. 거기에는 또한 언론개혁이 선행되어 이들이 앞장서야 정치, 경제, 사회분야 기득권층의 구각을 벗길 수 있다는 기대가 섞여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언론매체들도 상업주의에 바탕한 기업이다. 그럼에도 그들이 언론의 선명성을 유독 강도 높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 언론이 족벌체제까지 갖추면서 독과점의 폐단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상업주의만을 능사로 할 게 아니라 제 할 일을 제대로 하면서 챙길 것을 챙기라는 뜻이다.

알다가도 모를 일은 지난날 세칭 권언유착, 권언밀착을 통해 호황을 누리온 언론계- 그 중에서도 일간지들이 근년 들어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영자들은 지나친 증설경쟁과 종이값 급등, 원가상승에 따른 경영사정 악화 때문이라 하나, 본디부터 만성적이었다가 'IMF 한파'가 몰아치면서 광고수입이 격감하자 심화됐을 뿐이라는 주장이 많다. 어쨌든 최근 공개된 습자만을 갖고 따진다 하더라도 은행 감독원이 해당 은행책임자들을 문책하고도 남을 만한 수준이 아닌가 싶다.

언론사들은 지난 80년 이후 90년대 초까지 지속적인 호황을 누리며 사상 유례 없는 흑자를 낸 것으로 알려져 왔다. 80년대 초반 당시 전두환 정부는 언론통폐합 조치로 지금의 독과점 골격을 만들면서 적잖은 특혜를 주어왔고, 경제계는 정부시책에 맞추어 주로 광고를 통한 지원을 해왔다. 대부분 언론매체들이 여론을 만들어가면서 정부시책을 미화하고 일방적인 홍보를 해왔음은 물론이다. 공존의 논리에 충실했다고나 할까, 특수경기가 노태우 정부까지 이어진 것은 주지하는 대로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 5년을 보내면서는 대부분 자금사정이 어려워지고 말았다. 뿐인가, 각 사별로 그 동안 쌓인 은행 빚이 수천 억 원씩을 헤아리고 있어 이자를 갚기도 힘겨운 상황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10여 년 동안 공전의 호황을 누리다가 불과 4~5년 사이 나락으로 떨어졌으니,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기업경영에서도 최악의 결과를 빚었다고 할 수밖에. 현정부는 출범 10개월 여가 되도록 "언론도 스스로의 노력과 국민의 여론에 따라 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이라고만 밝혔을 뿐 과거의 정권처럼 도와줄 기미가 없는 듯하다. 새정부가 출범하면 으레 개혁을 외치게 마련이지만, 현정부는 'IMF 한파'라는 발등의 불까지 겹쳤기 때문에 설령 도와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모양이다 모든 분야의 개혁을 외치면서 언론계는 예외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인지…….

지난해부터 대폭적인 인원감축과 지면축소 등 감량경영을 단행하여 온 언론계는 아직도 경영취약점이 많은 데다 사회전반의 구조조정 소용돌이까지 겹쳐 어려운 탈바꿈의 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구태를 벗고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기틀을 세우느냐, 아니면 특혜를 받고 일부만이라도 살아남아 친정권적 독과점체제를 강화해나갈 것이냐 하는 시련대에 선 것이라 하겠다.